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음 10월 13일) 제217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완연한 가을 날씨... 농구를 즐기는 학생들

미세먼지 농도의 정상과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19일 전주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소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이 맑은 옷차림으로 농구를 즐기고 있다.

일자리 도시 만들기 집중

전주시, 내년도 예산안 1조6604억원 편성 시의회에 제출

전주시가 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19일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이 머물고 싶은 청년희망도시 만들기 등 일자리에 중점을 둔 1조6,604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1조5,258억원) 보다 1,346억원(8.82%)이 증액된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 4,491억원으로, 아동수당과 초·중·고 무상급식,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 등 복지분야 사업과 주요 국정시책 사업추진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 등이 증가하면서 올해 당초예산(1조3,258억원) 보다 1,233억원(9.3%) 증가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113억원(5.6%) 증가한 2,116억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이 머물고 싶은 청년희망도시 만들기 △아동·청소년 등 약자를 보듬고 미래가치를 지켜주는 사업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시의회에 제출된 2019년 전주시 예산안은 19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32일간 제3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시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경기안정과 및 시민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더 나은 전주시가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 끝에 예산안을 마련했다"라며 "전통과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전주다운 구도심, 새로운 산업과 기술, 미래 일자리가 가득한 신도시,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와 함께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 돕는다

전주시-자산관리공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전주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빛다미에서 허락이는 서민들을 함께 구해내기 위해

시와 캠코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희종)는 19일 전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양원 전주 부시장과 강희종 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와 전주시 소속 복지담당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한 '전주시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전주시 신용서포터즈는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을 명예단장으로, 시 산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캠코가 운영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접수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활동하며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캠코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 10

월 31일을 기준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한마음금융, 희망모아 포함) 및 국내금융회사 대상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캠코는 대상자의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최대 3년 내) 또는 채무조정(최대 원금의 90%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 신용서포터즈는 향후 재기 의지는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채무자가 없도록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게 된다. 또, 지원대상자가 접수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신청접수도 도울 예정이다.

김양원 전주 부시장은 "소액 장기연체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많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주시 신용서포터즈가 최선을 다해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유치원 문제 해결 '프랑스를 살펴라'

교육당국 공립유치원만 늘리면 해결될 것처럼 판단하나 "시설부족·모집과정 우선순위 밀려" 우려 목소리 높아

실제 프랑스의 경우 99%가 공립유치원... 예산 절반 국가 부담 유치원별 예산도 회계담당 공무원이 관리로 비리 사전 차단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불거지자 강력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처럼 보였으나,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유엔에 교육부장관도 공립유치원을 기존 500여곳에서 1000여 곳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판단하지만 실상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주에 사는 A씨(학부모)는 "정부

가 공립유치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너무도 많다"며, "몇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우리 아이를 입학시켜야 하는데 시설부족과 모집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입학조차도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공립유치원 우선 모집을 할때에 '처음학교'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우선순위를 법정저소득층으로

두고 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순이다.

문제는 선발규정과 교육방식에 있다. 공립유치원이 법정저소득층 위주로 선발하다 보니, 중산층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에 보내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공립유치원은 편협되지 않고 다양한 가정의 아이들이 모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 인후동 김모씨는 "누구나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지만, 실상은 우리아이를 공립유치원에 보내면 사회적으로 가난한 아이들과 교육을 같이 받는다는 편견으로 꺼린다"며, "이같은 애로점을 정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99%가 공립유

치원이다. 1%에 불과한 사립은 종교계에서 운영한다.

공립유치원 예산의 절반은 국가가, 4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각 지역 교육청에서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연간 계획에 따라 항목별로 예산이 할당되며, 대부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한다. 유치원별 예산도 회계담당 공무원이 관리한다. 철저한 예산통제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다.

또한 추가예산이 필요한 특별활동은 학부모 회의를 거쳐야 하고, 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와 교육당국도 외국 모범 사례를 잘 살펴 시행한다면, 유치원 교육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은성기자

제17회 전라북도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11월 24일(토) 오후 3시
전주 중부 비전센터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문의: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 063-288-9700)